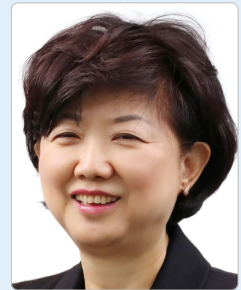


## 부실의대,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 前)국회의원  
ispark0530@gmail.com



“시골사람도 사람이다”, “시골사람도 좋은 치료 받고 싶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들은 20년간 질질 끌어온 서남의대 폐교를 하루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필자가 몇 년 전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남의대가 위치한 남원의 주민들이 항의 차 들고 온 현수막 문구였다. 이분들은 서남의대가 없어지면 지역주민들이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지역 경제도 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셨다. 물어볼 것도 없이 그런 주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각이라기보다 지역 정치인들의 선동에 의해 잘못 주입된 의견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당시 제가 이분들께 부실의대 폐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진정 지역 주민의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부실의대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지방의료원이나 병원에 시설, 장비, 인

력을 투자하면 즉시 의료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며, 그런 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 드리면서 그 분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예에서 보듯이 의대 유치는 오랫동안, 그리고 매 선거마다 출마하는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 40개(41개에서 폐교된 서남의대 제외)나 되는 의대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부실의대도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의대가 바로 서남의대였고 이를 계기로 의평원 법이 생기게 된 것이다.

건국 이래 여러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이렇게 많은 크고 작은 의대들이 생기다 보니 대학마다 의학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이었고 그래서 이를 평가, 인증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의학교육평

가원(이하 의평원)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의평원이 각 의대의 협조를 얻고 어렵게 시행했던 의대평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의 퇴출에는 사실상 어떤 역할도 불가능 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만든 법이 의평원 법이었다. 이 법에서 의대는 반드시 의평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의평원 법은 발의(2013년 7월)에서 통과(2015년 11월)까지 무려 2년 반이나 걸렸지만 사실 그 기초 작업은 지난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정부 측, 특히 교육부의 저항이 대단히 심했던 법이었다.

우리나라 의평원은 애초부터 세계기구에서도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평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기구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의대평가를 교육부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즉 의대 이외 다른 단과대학들에게 하던 방식을 고집하였다. 의대 평가를 공대나 인문학 교수 등 전문성이 없는 교수들이 하도록 하자고 교육부는 주장했다. 그래도 끈질기게 교육부를 설득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의평원 법이 만들어진 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의대 신설 계획이 다시 대두되면서 이 법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필자가 이를 막고자 2019년 2월에 기존 의대는 물론 의대 신설부터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실의대 신설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실의대 신설 방지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법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

고 정부와 민주당이 적극 주장하였던 공공의대 신설 법안도 역시 자동폐기 되었다.

모든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 내에 의대가 없는 후보들이 의대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애초부터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므로 당선 후에 법안도 쓰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21대 국회 시작부터 벌써 자주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이밍이 절묘해서 거대 여당이 국회 권력을 독점한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일어나고, 이제껏 미루어 왔던 의대신설 욕구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의료인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 결과 거대 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까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의대신설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발의된 의대신설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목불인견으로, 어떤 법안은 거의 코메디 수준이다. 그런데 이 법안들의 공통점은 의평원 역할을 무력화 하고, 의대 신설 허가를 (의평원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정하며 의대신설 목적이 노골적으로 지역활성화 같은 정치적 목적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표만 의식하다 보니 행정구역 마다 의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치논리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 중 몇 개 예를 들어보겠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도”) : 김원이, 권칠승 각각 대표발의], [(공공)의대 설립을 교육부장관이 인가 : 기동민, 박완주, 이용호, 서동용, 김성주 각각 대표발의] 등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며 가장

※ 관련 법률안 현황

의안번호	법률명	구분	대표발의 (발의일자)
168	의료법	일부개정	김원이의원 ('20.06.04.)
239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	김원이의원 ('20.07.27.)
2537	지역의사법	제정	권철승의원 ('20.07.30.)
25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박완주의원 ('20.06.08.)
19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용호의원 ('20.06.05.)
690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서동용의원 ('20.06.19.)
79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기동민의원 ('20.06.19.)
120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김성주의원 ('20.06.30.)
45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서삼석의원 ('20.06.01.)

황당한 법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구소멸위기지역에 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 서삼석]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게 된다.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런 많은 ‘악법’들이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묵인 하에 마구잡이로 국회를 통과하여 제2의, 제3의 서남의대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의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의료를 걱정하고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경계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적극 대처해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제 20대 국회 끝까지 결사적으로 막았던 공공의 대신설 건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국회권력을 독차지하면서 다시 힘을 받게 되었고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무지막지하게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주장한 것이 이번 의사 파업을 촉발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정부와 청와대는 이성을 되찾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란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의료계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 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의대 신설에 투자되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기존 의대와 대학병원들 또는 기존의 지방 의료원, 공공병원, 정부 각 부처 소속병원들, 예를 들면 산재병원, 경찰병원, 군병원 등에 시설, 장비, 인력 투자를 충분히 하면 지금 당장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국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게 되고 세금절감,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업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우리나라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 등 진정한 윈-윈(win-win)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소모적이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시무시한 강경책을 거두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국가에서 전문가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정부가 기억해 주기 바란다.